

제공일자	2014.4.2(수)	담당자	정원석 연구위원	
홍보담당	변철성 수석(02-3775-9115)	연락처	02-3775-9037	총 2매

제목 : 보험연구원 『소득수준을 고려한 개인연금 세제효율화 방안』 보고서 발간

- 보험연구원(원장 강호) 정원석 연구위원은 『소득수준을 고려한 개인연금 세제효율화 방안』 보고서에서 세제적격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의 변화가 중위소득층의 노후보장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측하였다.
- 소득계층별 세액공제 효과를 실증분석한 결과 중위소득층에서 연금가입확대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분석되었다.
-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책제안으로는 첫째, 세액공제율의 소득계층별 차별화. 둘째, 면세점이하 소득자를 위한 개인연금 저축에 대한 보조금지급. 셋째, 중산층이상의 개인연금 저축 활성화를 위한 세제혜택한도의 상향이 있다.

□ 보험연구원은 최근 “소득수준을 고려한 개인연금 세제효율화 방안”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함.

- 2013년까지 적용된 세제적격 개인연금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는 지원의 역진성문제가 지적되어 왔음.
- 정부는 세제지원의 역진성을 해결하고 중산층이하 계층의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세제지원을 두텁게 하기 위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였음.
- 제5차 재정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세제적격 개인연금의 납입액 규모와 소득과의 관계를 실증분석해본 결과 중위소득층의 소득에 대한 개인연금저축의 탄력성은 고소득층 보다 50% 저소득층 보다 10% 이상 높은 것으로 분석 됨.

- 저소득층의 경우 면세점 이하이거나 미래저축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세제혜택 확대를 통해 개인연금저축을 활성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.
 - 고소득층의 경우 세제혜택이 다소 줄더라도 개인연금저축만큼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저축상품이 없으므로 납입액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됨.
 - 국가재정 측면에서는 고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게 되어 전체적인 재정지출은 670억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었음.
- 개인연금저축 대한 세액공제율을 소득계층별로 차별화를 통해 개인연금 가입 및 유지를 활성화해야 함.
- 전체 조세지출이 변화하지 않는 선에서 중산층 및 저소득층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세액공제율을 차별화 한다면 정부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더 많은 세제혜택이 돌아 갈 수 있음.
-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개인연금 보조금의 지급이 필요함.
- 면세점이하 저소득층의 경우 세제지원만으로는 개인연금 가입률 제고에 한계가 있음.
 - 독일의 리스터연금처럼 직접적인 보조금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역시 스스로 노후를 준비 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.
- 중산층 이상에 대한 개인연금저축 활성화를 위해 세액공제 상한선의 확대가 필요함.
- 고소득층이 개인연금저축 가입액이 400만 원에서 정체되어 있는 이유는 세제혜택의 공제액 상한선 때문인 것으로 보임.
 - 장기적으로 세액공제율은 하향조정하되 공제액의 상한선은 올리는 방식으로 중산층의 개인연금저축 가입을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. 끝.